

다산포럼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기후위기란 단지 날씨 변동이 심하다는 수준을 넘어 기존의 기후 패턴이 심각할 정도로 변하는 것이다. 일례로 춘하추동의 계절 구분이 사라진다거나 한국의 경우처럼 온대 몬순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 동남아에서 보던 스콜 현상이 자주 관찰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한쪽에는 폭염이 다른 쪽에선 폭우가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문제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아니면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것이 문제다 등등 여러 진단을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단편적 진단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라 본다.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무한한 이윤을 다른 편으로 편리한 생활을 추구한다. 문제는 그렇게 무한히 돈벌이(이윤) 경제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자원을 무한정 채굴하고 인격체인 사람을 오직 노동력으로만 살아가게 만들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을 통해 물질

기후위기에 맞설 참된 대안

을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 버렸다. 지구는 어느 시점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인류는 1989년을 기점으로 ‘임계치’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1989년에 한계선인 350ppm을 달성한 뒤 지금은 420ppm을 훌쩍 넘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를 넘겨버렸다고 최근에 인정했다.

그러면 무엇이 기후위기를 부르는 온실가스인가? 세계의 수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온실효과와 원인을 찾았더니 여섯 가지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나왔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화 이렇게 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우선,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88%를 차지한다.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제조 공정), 그리고 차량 배출 가스에서 대부분 나온다. 그 외 가정 난방이나 요리 시에도 나온다. 메탄가스는 LNG를 채굴하거나 LNG를 이용한 발전소에서 많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LNG 발전소를 화력발전소의 대안이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쓰레기터미에서도 메탄이 나오고 축산업에서 소가 끼는 방귀에서도 엄청난 양이 나온다.

그 외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화 같은 맹독성 온실가스는 석탄 폐기물 소각, 에어컨/냉장고 냉매, 스프레이,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같

은 것들 폐기 시에 배출된다. 즉,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지구 온난화 관점에서는 독성 가스들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원료부터 사용과 소각까지 완전 온실가스 투성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대안은, 자본의 원리를 넘어 생명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脫자본, 進생명을 추구하는) 생태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대신 민본주의를 추구하되 지나친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민주주의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의 사이토 고헤이라는 학자는 탈성장 코뮤니즘이라는 개념을, 독일의 마리아 미스나 인도의 반다나 시바 같은 사람들은 에코페미니즘 이야기를 한다. 머레이 부킨은 사회 생태주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준을 꿰뚫고 있는 원리를 보면 책임성의 경제, 순환성의 경제, 선물의 경제, 다양성의 경제를 말하고 있다.

반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책임의 경제, 단절성의 경제, 상품화의 경제, 획일성의 경제다. 그러면 진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2008년 에코도르의 ‘생태헌법’, 둘째, 1972년 부탄의 GNH(국민총행복) 개념, 셋째, 분권적 마을공동체와 탄소중립도시계획, 넷째, ‘적정생산-적정분배-적정생활-적정순환’의 새로운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심지어 양지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것이 참된 대안이다. 이 모든 대안적 구상의 공통분모는 ‘조금 먹고 조금 싸자’라는 공생의 철학이다.

NGO 칼럼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8월 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지역에 작은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대통령 사면 후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간에 활발한 정치적 행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문제 제기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과도한 견제에 나서기보다 정치 혁신을 위한 경쟁에 나서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에 대한 이런 일갈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호남 정치의 쟁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일당 독점의 정치 체제를 구축해왔다. 문제는 이 일당 독점의 정치 체제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었느냐이다. 최근의 몇몇 선거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영광 군수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는 정령 이슈 등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다. 이때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 전략은 이재명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압도적 지지로 이 논란

정치의 쓸모

의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몸치 앓을 수 없다. 지역 군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군수를 뽑는 선거에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해 표를 달라는 것이 과연 바른 주장인가? 그것도 군수로서의 자격에 대한 여러 논란을 가진 인물을 내세워 놓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주장인지 민주당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다. 그러나 2, 3위를 차지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의 득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만약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민주당이 패배할 수도 있는 선거였다.

담양 군수 보궐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특정 후보를 배제하는 경선 과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이 후보는 반발해 조국혁신당으로 옷을 갈아 입고 선거에 나섰다. 이번에도 선거 전략은 전국적 이슈 몰이였다. 내란 극복을 위한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스스로 상식에 맞지 않은 불공정한 일을 해 놓고 대의를 위해 우리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 다시 반복되었다.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승리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호남 정치의 현주소와 변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하에서 공전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오랫동안 호남 정치를 왜곡해 왔다. 청렴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

도 무시하면서 원하는 후보를 꽂아 넣는 짓을 해도 거리낌이 없는 정치, 선거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무시하는 선거 전략, 유력자와의 친소 관계로 후보의 경쟁력이 평가되는 정치. 이것이 호남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런 정치 지형에서 시민들을 위한 효능감 높은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상상력과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치열함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고 유력자와의 줄대기에 골몰하는 호남의 정치를 견뎌내야 하는 시민들은 불행하다. 이 점에서 민주당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정치 혁신을 위한 경쟁에 나서라는 시민사회의 외침은 효능감 높은 정치의 복원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심정을 대변한다.

이 선거 사례에서 호남인들은 정치의 쓸모를 복원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당 공천 시스템의 혁신, 일당 독점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당제의 시스템, 시민의 참여 공간과 깊이를 확대하는 지방 자치 시스템 등 효능감 높은 정치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광주의 시민사회 역시 효능감 높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곧 지방선거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파시즘의 발호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효능감 있는 정치제도와 인재 발굴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고



오종욱
광주광산구선관위 주무관

10월 달력을 넘겨보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국경일인 개천절, 한글날과 이어지는 1주일의 황금연휴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연휴 기간에 자신을 위한 휴식시간을 갖거나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가족, 지인을 만나기 위해 귀성길을 떠난다.

명절에 고향 친구, 이웃 등을 만나 인사를 하면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만 내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금품선거 없는 한가위가 되기를

를 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와 관계있는 회사·법인 등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주체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주민체육대회에 금품을 찬조하거나, 경로당에 명절 인사를 다니면서 과일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 동창회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통용될 수 있는 행위들이 기부행위 제한자에게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기부행위는 금품을 제공받은 대상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제공받은 금액·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듯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상을 게시하거나, 자동통보통신

의 방법이 아닌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이 있다. 예전에는 선거운동 기간 예외 규정이 없었으니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보자 간의 경쟁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일부 허용된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유권자의 인식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명절을 계기로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뉴스로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금품선거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는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社說

유통구조 개선으로 먹거리 물가 잡아야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는 세계에서조차 알아 줄 정도다. 푸드플레이션이 일상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는 OECD 38개국 평균보다 1.5배나 높아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로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4.8%나 올라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먹거리 물가 상승 원인은 농산물 자급률이 낮고 유통 비용이 높기 때문인데 자급률이야 당장 끌어올릴 수 없다지만 유통 비용은 구조 개선을 통해 낮출 수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소비자들이 사 먹는 농축산물 가격의 절반 가량이 유통비이고 유통비 비중이 해마다 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한 농축수산물유통공사(aT)가 내놓은 ‘국내 유통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평균 49.2%였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1만원에 구매하면 유통 과정에 4920원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 비율이 1998년 39.8%에서 해마

다 증가하면서 10%가량 상승했다. 유통업체의 이윤율도 2023년 기준 14.6%로 5년 전보다 1.3% 오른 것을 보면 유통 구조 개선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인 양파와 배추, 무 등은 유통비 비중이 70~80%에 달했는데 경제 중심인 국내 유통 구조가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서민층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지난해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 비율은 31%로 소득 상위 10%의 3배에 달했다. 먹거리는 필수 소비재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줄일 수 없다보니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대하고 정가·수의매매를 조속히 도입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멸위기 농촌에 활력 불어넣는 대학생 농활

며칠 전 광주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곡성 옥과에서 실시한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이 화제를 모았다.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의 전유물이었던 농활이 이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들에게 이런 현실을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광주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옥과의 장미비닐하우스 농장에 투입되자 마을에 금세 활기가 돌았다. 지난해 폭우로 침수됐지만 지을 염두를 못했는데 학생들이 작업에 나서자 비닐하우스 두 동이 깨끗하게 정리됐고 주민들은 인적이 끊길 정도였던 마을이 사뭇바뀌었다고 좋아했다.

학생들이 느낀 점도 많았다. 심각한 고령화에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의 현실과 힘든 노동 속에 농업의 가치를 깨달았다

고 한다. 노인들만 있는 마을에 변변한 약국과 병원이 없어 아파도 쉽게 가지 못하는 농촌의 의료 현실을 경험하면서 노인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 대학생들이 있었다니 농활의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한다.

광주대 학생들의 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소멸 위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한 새로운 농업·농촌 국민운동이라는데 대학생들의 농활과 연계해 효과를 보고 있나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활은 1980년대 절정에 달한 후 거의 사라졌는데 청년들을 볼 수 없는 요즘 더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싶다.

無等鼓

역사서애나 나오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이라는 단어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매관매직은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킨다는 뜻이다. 즉 뇌물을 받고 관직을 내려준다는 게 정확한 의미로, 비리 주범이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임을 명확히 한 단어이다.

매관매직은 조선시대는 물론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청탁 풍습이다. 조선은 개국 이후 매관매직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구한말에는 더욱 성행해

거북이매직

이 제기되자 영조때 분경 금지 대상자 범위가 축소되고 분경도 인사철에만 금지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순조·헌종·철종 시기 세도정치로 매관매직이 극성을 부렸고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세도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거의 모든 관직이 돈으로 거래됐다. 이를 반영하듯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관찰사는 10~20만 냥, 군수 자리는 5만 냥, 참봉은 4250냥이라고 기록돼 있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권 아래서도 매관매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천만원 짜리 목걸이로 차관급 자리

를 꿰차고, 금거북이로 장관급 자리에 임명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태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최근에 이 거북이가 고작(?) 5돈짜리로 밝혀져 국민들을 더욱 씁쓸하게 하고 있다.

매관매직은 시대에 따라 형태나 방법이 변했는지 몰라도 종국에는 정권 붕괴나 국가 멸망을 초래하는 망국병이 확실하다.

/채희종 디지털 본부장chae@